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진 희 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요약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많은 억측에도 불구하고 199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 총비서에 추대되어 체제를 확고히 해나갔으며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을 맞고 있다.

그간 김정일 위원장 공개 활동의 특징을 보면 점차 횡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정 장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건강 이상설과 관련하여 볼 때에도, 아직까지는 국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관계 및 국제 환경의 호기일수록 군 관련 행사 또는 군 현지도 횡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보여진다. 즉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에서의 군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 정권 장악력 그리고 당의 지도력 등은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와 사상의 문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최근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선군 사상’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용의 체계화 진전이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선군 사상의 ‘창시자’에 대한 혼란이다. 김일성 창시론을 언급하던 북한이, 2003년 12월 『로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창시론’을 언급했지만 2005년 1월 다시 그 내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선군 사상의 창시자가 둘이라는 언급은 아직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작게는 이데올로그들의 혼란 그리고 넓게 보면 후계 구도의 혼란이라는 예측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가는 기존의 주체사상을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만간 주체사상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이론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지만 아직 그러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와 사상의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은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도 ‘2.13 합의’ 이후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기 요인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케 한다.

문제 제기

김일성 주석 사망(1994.7) 이후 김정일 위원장으로서의 후계 승계에 대한 주변의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3년상'이 종료된 직후인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추대되어 체제를 확고히 해나갔고 그간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

1998년에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되었으나 북한의 사정은 여러모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1995~1996년 '큰물' 피해로 인해 1990년대 말 북한 주민 아사자가 2백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1997년과 1998년 잇따른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체제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고 2002년 9월에는 북일 간 최초의 정상 회담과 아울러 '9.17 평양 선언'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성급하게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2차 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또 다시 북한 문제는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또한 2002년 7월 단행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만성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경제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 경험만이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더욱이 북일간 납치자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04년 말 불거진 가짜 '유골'(요코다 메구미 사건) 문제는 북일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갔다.

이에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급기야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여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켰고,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 성명'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위폐 사건'과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동결 사건' 등으로 인해 6자회담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2006년 북한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강수를 전개하였다. 7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었다.

다행히 2007년 초 6자회담에서 극적으로 '2.13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10월 '2007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면서 동북아에서의 북한 문제는 매듭이 풀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종전선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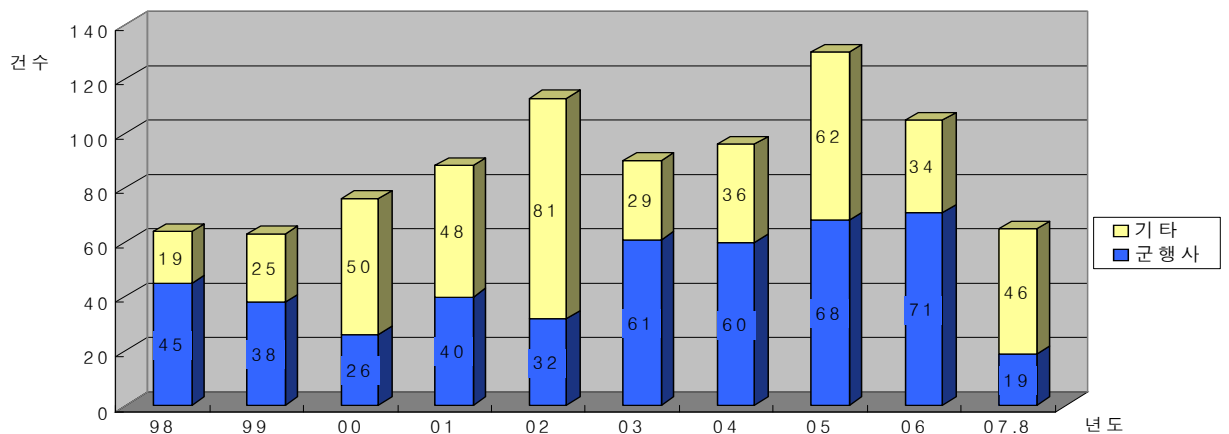
이 처럼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의 한반도와 동북아는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2.13 합의'를 계기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북한 자체의 요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분야의 내적 상황과 아울러 주변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반도의 진로를 예상하도록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과 엘리트 변화

김정일 위원장 공개 활동의 특징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공식 추대되어 당권을 확고히 하였고, 1998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과 함께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당과 국가기관 그리고 군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면 아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1>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1998~2007년)



구분 \ 년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8
기타(건)	19	25	50	48	81	29	36	62	34	46
(%)	29.7	39.7	65.8	54.5	71.7	32.2	37.5	47.7	32.4	70.8
군행사(건)	45	38	26	40	32	61	60	68	71	19
(%)	70.3	60.3	34.2	45.5	28.3	67.8	62.5	52.3	67.6	29.2
합계	64	63	76	88	113	90	96	130	105	65
전년대비증감	0	▽1.6	▲20.6	▲15.8	▲28.4	▽20.4	▲6.7	▲35.4	▽19.2	(가)

(가) 전년 8월 대비 11.0% 감소

* 출처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북한정보>북한소식>김정일동정) 참조, <http://www.nis.go.kr/app/north/news/northleader...>(검색일: 2007.9.12).

첫째, 위기시 군 관련 행사 참여 횟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당 총비서 취임 직후인 1998년 70.8%, 제2차 핵 위기가 발발한 2002년 10월 이후인 2003년 67.8%, 미사일 및 핵 실험을 단행한 지난 2006년 67.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가 풀려나갈 때에는 군 관련 행사 참여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던 해에는 34.2%로 군 행사

참여 비율이 전년대비 60.3%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일 정상 회담이 열린 2002년 역시 28.3%로 대폭 감소하였고, 2.13 합의로 시작한 올해 역시 8월까지 29.2%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64건이었던 것이 2002년 1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후 대략 100건 내외의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정일의 국정 장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건강 이상설과 관련하여 볼 때에도, 아직까지는 국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관계 및 국제 환경의 호기일수록 군 관련 행사 또는 군 현지도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보여진다. 즉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에서의 군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아닌가 평가된다.

북한 엘리트 변화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전부터 군을 장악했고, 당에서도 2인자의 위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의 주변은 실권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명 1세대들이 퇴진하였고, 주변 인물들이 사망하는 등의 자연 변화 요인들이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는 혁명 1세대이면서 군 실권자인 오진우 인민부력부장, 최광 총참모장, 이을설 차수 등이 건재하였고, 이 들 외에 조명록 공군사령관, 김익현 대장을 비롯하여 사단장급 이상 550여명이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세력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 부자의 친인척도 핵심 요직에 기용돼 있었다.¹⁾ 김일성 주석의 외척으로는 평양시 당책임비서 강현수, 정치국 후보위원 강희원, 당통일 전선부장 강주일, 당역사연구소장 강석승 등이 있으며, 항일빨치산 2세로서는 오중치의 아들 오극렬 당부장, 김혁의 아들 김환 부총리, 6.25때 전사한 군총참모장 강건의 아들 강창주군단장,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 빨치산출신 전창철(1982년 사망)의 사촌동생 전하철 당부장, 6촌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등이 주변에 포진돼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김일성 주석의 사망 20년 전부터 후계 체제를 다져왔고 주변 세력이 막강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인물들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혁명 2세대와 군 중심 인사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로는 김국

1)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김일성의 사촌동생 김신숙(86년사망)의 남편, 총리 강성산: 김일성의 이종사촌, 부총리 김창주 / 당중앙위 부장 김봉주: 김일성의 사촌형제,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김달현/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김일성의 조카, 당비서 황장엽: 김일성 고모의 사위, 당경공업부장 김경희: 김정일의 여동생, 당청소년사업부장 장성택: 김경희의 남편 등.

태, 김용순 당 비서와 장성택 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리고 군 인사로는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박재경·현철해·리명수 대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혁명 1세대(오진우, 최광, 이을설) 들은 사망하거나, 일선에서 물러섰고 친인척인 김영주 부주석은 현역에서 은퇴하였고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 사망(2002. 5), 김정철과 김정남의 어머니인 고영희 사망(2004. 6)으로 친인척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는 연형목,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외에는 군 중심의 인사들이 핵심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주석단 명단 (2004)

- 김정일 국방위원장	- 김국태 당비서(이하 동일)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하철 / 김종린 / 김기남
-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	- 곽범기 내각 부총리(이하 동일)
- 박봉주 내각 총리	- 로두철 / 전승훈
- 김영춘 국방위원 겸 군 총참모장	-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 김일철 국방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리을설 군 원수
-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 김익현 군 차수(이하 동일)
- 전병호 당비서(이하 동일)	리종산 / 김룡연 / 장성우 / 리하일
한성룡 / 계응태 / 최태복	박기서 / 전재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 김철만 전 국방위원	-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 서만술 재일총련 중앙상임의장

사상의 변화: 주체와 선군

북한은 여전히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선군 사상을 통해 ‘실정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군 정치, 선군 사상을 비롯한 용어들은 1997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제2차 핵 위기 이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99년 ‘군 중시 사상’이 등장한 이래 2001년부터 선군 사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군 사상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지만, 2002년 하반기부터는 ‘김일성 동지의 선군 사상’ 또는 ‘수령님의 선군 사상’ 등의 표현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군 사상은 김일성 주석의 주체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창시한 사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선군 사상의 위상에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선군 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 수령’이라는 것이 2002년 3월 25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로동신문은 장문의 기사를 신고, 느닷없이 선군 사상의 창시자가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김정일 창시론’을 보도한 바 있다. 그 이전까지 김

정일 위원장은 선군 정치의 창시자이기는 했지만, 선군 사상만은 김일성 수령의 창시물로 표현해 왔다. 즉 선군 전통과 선군 사상은 김일성 수령의 유산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 정치’를 창시했다는 것이 북한 측의 일반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 추대 12주년을 앞둔 2003년 12월 22일 1면 전체를 뒤덮은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에서는 “오늘 선군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선군 사상의 창시자이며 선군 신념의 제일 강자, 제일 배짱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서계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주목되었다. 드디어 ‘김일성 주석의 주체 사상’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 사상’으로 이동하였다는 등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내내 김일성 또는 수령의 선군 사상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사상’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신년 공동 사설의 표현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군 사상의 창시자’가 다시 김일성 주석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김일성 동지는 선군 사상의 창시자이고 우리 당 선군 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신.....수령님의 선군 사상과 령도를 계승하고”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3년 12월 22일자 『로동신문』의 논설의 표현은 단순히 오자인가? 아니면 하나의 사상에 대한 창시자가 둘이란 말인가?

어떻게 같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논설과 공동사설에서 2년의 시간차를 두고 세 번의 전혀 다른 언급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주석과 국방위원장의 ‘이름자’를 두고 두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 말이다. 결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사실을 추측케 하고 있다.

첫째, 선군 사상의 이론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데올로그들의 대폭적인 교체 또는 변동을 예측케 한다. 둘째, 이와는 달리 단순하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다시 과거의 논리로 복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김정일 창시론’은 충성 경쟁에서 불거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군 사상에 대한 ‘김정일 창시론’의 폐기는 이를 주도했던 그룹에게는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 기관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데에는 필시 남모르는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을 것이다.

선군 사상은 기존의 주체 사상의 사상, 이론, 방법의 내용 중 일부 다른 해석들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제 건설 이론과 조국 통일 이론의 일부 내용의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 사상의 경제 건설 이론에서 제기해 온 ‘중공업 우선’ 정책은 ‘국방 공업’ 우선론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기존 경제 건설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 관리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아닌 부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조국 통일 이론의 대남 혁명론을 대신할 수 있는 선군 사상에서 종합적인 설명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대남 인식론에서는 남북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북한의 대남 혁명론의 변화로까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문

현상으로 만큼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문헌을 전체로 평가할 때 선군 사상은 주체 사상을 대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 맑스-레닌주의와의 결별 과정과는 달리, 주체 사상은 외부 사상이 아닌 북한 토착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대 수령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주체 사상과의 차별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선’,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장기적, 선군 사상이 내용적으로는 주체 사상을 대체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체 사상 총서의 내용들 중 경제 이론과 조국 통일 이론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이론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계자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령론’에 의하면 독창적인 사상이 없을 경우 ‘1국적 수령’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고 보편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할 경우 ‘국제적 수령’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김일성 주석 이후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제3세대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국적 수령’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선대 수령의 위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제적 수령’의 위상을 얻으려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와 경제

당의 영도적 역할: 당적 지도의 지속과 변화

김일성 주석 시대의 조선 로동당은 “공화국을 령도”하는 위상을 확고히 해왔으며,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조선 로동당은 국방 위원회와 이원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당 우위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헌법 수정 이후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하였고, 선군 정치 및 선군 사상이 강조되면서 북한의 군사 우위 체제가 도래한 것이라는 평가가 없지 않았으나, 북한의 모든 문헌들은 여전히 당 우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영남 전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각각 개회사와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규정하였지만, 여기서 국가란 ‘공화국’을 의미하며 여전히 헌법 11조에는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이 령도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여전히 당우위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인 6일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강현수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로 호칭함으로써 국가 수반으로 새로이 성격 규정된 국방위원장 추대에도 불

구하고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책을 중시하는 데는 변화가 없음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조선로동당보다 상위에 ‘수령’이 존재하며(영도 체계), 김정일이 모든 분야의 수위의 직책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과 국가기관, 또는 군 기관의 우선 순위는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국가 기구 차원에서의 변화: 헌법 개정

1998년 수정 헌법 전문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장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정무원을 폐지하고 권한이 약화된 내각(내각 총리)을 부활하였으며, 주로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케 하고 있다.

< 표 2 > 북한 헌법 개정 및 수정 현황표

연도	개정·수정	비고
1948.9.8	제헌 (10장104조)	-48.8.25 총선거(5백72명 대의원 선출) -48.9. 2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 개막
1972.12.27	사회주의 헌법제정 (11장149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노동당 우월지위 명시 -주체사상의 헌법 명시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1992.4.9	대폭개정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 -국방 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마르크스-레닌주의 후퇴 및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998.9.5	수정·보충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상임위원회로 격상 개칭

다만, 김일성의 직책중 하나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방위원회 강화를 통해 해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낳고 있다.

정책의 주요 노선 및 방향의 변화

정치 분야에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강성대국 건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이념을 주창하고 있다. 1990년 『근로자』 12월호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1994년 이후 점차 사용빈

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1997년 7월 로동신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강성 대국론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시한 국가 전략 목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 정책과 국방 공업의 우선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북한은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등장시켜 대남 관계에서 기존의 대립 구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 및 자립적 경제 건설 노선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85년 출간된 주체사상총서 7권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본질적 내용은 자립적 체계가 선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는 데 있다.....현대적인 강력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적 공업체계의 창설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의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의 3대제일주의(농업, 경공업, 대외무역)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 이르러서는 국방 공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 당시에는 노선의 변화로 까지 해석하기는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1년도와 1972년도의 신년사에서와 같이 국방 공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례는 있어 왔다. 이는 1966년 제기된 당시 경제 국방 병진 노선과 1960년대 말 국제 관계의 갈등 구조(월남전, 쿠바 위기 등) 속에서 등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 이르러서는 국방 공업과 농업, 경공업의 위상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중공업 우선 정책이 국방 공업 우선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언급이 제시된 바 있다. “현실은 국방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치렬한 반제투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이 밖에도 “국방 공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며 ‘선군 시대의 요구’로 표현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격상시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 커다란 차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40년 동안 지속해왔고, 주체사상에서도 명제화 해 온 ‘중공업 우선론’은 2003년에 이르러 ‘국방 공업 우선론’으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경제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인 자력갱생, 속도전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경제 관리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전면적인 변화가 아닌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외 환경의 변화

제네바 합의 구도에 놓여 있던 북미 관계는 2000년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대립

관계로 변화하였고, 제2차 북핵 위기(2002)로 인해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북일 정상 회담(2002. 9 / 2004. 5)과 납치자 송환으로 북일 관계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고이즈미 정권 2기 내각(2004. 10)의 우경화 및 행불자 10명에 대한 확인 문제, 그리고 요코다 메구미 유골 사건 등으로 인해 북일 관계는 심각한 갈등 관계로 변화하였다. 특히 아베 정권 등장(2006.9) 이후 북일 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으나 최근(2007.9) 후쿠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후진타오 정권(2003) 이후 북중 관계는 보통의 우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혁명 세대가 아닌 테크로크라트 출신의 후진타오 정권은 북중 관계에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지원 관계를 중단하고 보통의 우호 관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북러 관계 역시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협력 관계로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두 차례의 정상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2007 남북 정상 선언’ 이후 대규모 협력 사업이 예견되고 있다.

국가	김일성 사망 직전		김정일 시대(최근)
미국	핵갈등 -> 대화	⇒	핵 갈등 ...> 대화 예상
일본	수교회담 -> 중단		정상회담 및 수교회담 진행 납치자문제 갈등
중국	혈맹관계		우호관계
러시아	관계 중단		정상회담
남북	대립의 지속과 (초기)교류		정상회담 및 대화 지속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

이상과 같이 북한의 대외적 환경은 북한의 생존과 개혁·개방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의 변화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대규모 남북 경제 협력 구상은 북한의 대남한 및 대외 의존도의 증가를 큰 폭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케 한다.

맺는말 : 후계 구도와 북한 사회의 전망

차기 후계 구도에서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1인 수령제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집단 지도 체제도 수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체 사상의 영도 체계의 지속, 수령제 사회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는

1인 승계가 원칙이며 집단 지도 체제의 실시는 영도 체제와 주체 사상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1인 승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승계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집단 지도 체제로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의 안정성이 관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미 김정일 이후의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김정일 위원장은 만 65세를 맞이하였고, 장차 북한 정치구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둘러 후계 구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차남 김정철의 승계 가능성들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그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초중반 김정일로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온사회의 주체 사상화’는 ‘온사회의 선군 사상화’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선군 사상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당시 김정일 비서의 주도로 ‘3대혁명소조운동’이 전사회적으로 일어나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갔지만, 아직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사회운동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난 등의 위기 속에서 후계구도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금의 김정일 위원장은 위기 타개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최근 ‘호의적’ 대북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일본의 후쿠다 정부가 ‘납치자’ 문제를 어느 정도 삭감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인지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 핵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후 예상되는 쟁점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해낼 수 있는가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개최된 ‘2007 남북 정상 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